

2023년 제2차 광주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광주매일신문 제8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박남기)는 19일 오전 본사 TV스튜디오에서 '2023년 제2차 독자권익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전남 현안사업 보도 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면 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註

“지역 현안사업 다양한 의견수렴 해법 모색을”

◇제8기 독자권익위원

(기나다순)

-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위원장)
- ▲김형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 ▲오주섭 광주경찰서장
- ▲윤경철 전남대 의대교수
- ▲이명자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
-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정용기 전남대 경영대교수
-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광주매일신문 제8기 독자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본사 TV스튜디오에서 '광주·전남 현안사업 보도 방향'이란 주제로 2023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영근기자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위원장)= 이번 회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의 대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현안 관련 보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이야기들이 잘 정리돼 지면에 반영됐으면 한다.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이번 주제는 다소 무거운 과제 같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돼온 일이다. 최근 법이 제정되고 시·도지사가 합의해 긍정적으로 협력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희망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이는 특별법으로 처리될 게 아니라,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정부가 군사 전략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성사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된다. 광주와 전남 사이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민간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본다. 광주 시민이 열망하는 일이라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야 하고, 결국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자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 요즘 지역의 큰 이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의대 설립, 복합쇼핑몰 설립,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등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지역 정가나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민의 의견은 분명하지 않다. 지역언론인 광주매일신문이 시민들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재구성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각 구단위, 연령대, 전문분야별로 사실을 드러내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이 이를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민들이 지역의 여러 이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오주섭 광주경찰서장=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광주시에만 맡겨버린 상황이다. 단순히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광천동의 경우 규모 확장에 따른 교통 불편, 지하철 공사, 여기에 아파트 2천700세대가 들어선다면 겁

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현재 광주시가 내놓은 교통정책은 터무니 없는 해결책이다. 상생문제가 정말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내용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욱 난감해질 것이다. 전남의대 설립의 경우, 동·서부 간 합의가 우선이다. 정보 제공이나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

군공항 이전, 시·도 합의 정부 주도 대책 마련 절실
교통정책·경제생활권 등 복합쇼핑몰 장기계획 필요
전남의대 동·서부 합의...취약지 의료시설 선행돼야

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큼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주는 것도 중요하다.

▲김형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전남 시·군이 인구소멸 대상 지역이 돼 있고, 광주를 가운데 두고 전남

동·서·북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민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안으로의 공항 이전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후 전철망이나 광역교통망을 통해 광역 도시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항, 철도, 항만, 도로 등 교통 요건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광주가 건강한 호남의 중심 도시가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의대 설립이 어렵다면 의사 수급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병행하거나 지방에 중소형 병원이라도 생겨야 한다.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 시간을 다투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다. 의료기관 부재로 서울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런 상황에선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 동·서 위치를 떠나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전남 지식인들의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군공항 이전은 민간공항까지 전부 다 이전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합의된 상태에서 국가적 시책인 군공항 이전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탄약고 이전은 공항 이전과 함께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탄약고는 전쟁을 대비한 것으로 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의대 설립에 관련해서는 광주매일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룬 바 있지만 광주·전남 조직 개편안이 통과돼 별도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학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학 지원팀이 혁신추진단으로 확대돼 운영된다. 추진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지면이 좀더 자세히 알려줄까 생각한다.

▲윤경철 전남대 의대 교수=수도권

의료 집중이 심화되고, 전남지역의 취약한 의료 현실이 부각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전남의대 설립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남 정치권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다.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먼저, 정부에서 볼 때 명분이 미흡할 수 있다. 경남이나 인천도 인구 대비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배출되는 시간까지는 족히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야 한다. 둘째, 전남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무대만 만들어 놓고 20여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역에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 질 높은 대학병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종합병원 신설에 대한 관심이 의대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잇따라야 한다. 의대 설립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대안을 세우고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정용기 전남대 경영대 교수=전남의대 설립보다 대학병원 설립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한계로 전남 동부나 서부에 대학병원이 설립되는 게 더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를 시·도가 나서서 일을 거꾸로 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한다. 복합쇼핑몰 현안과 관련해 아쉬운 점은 이를 주관하고자 하는 기업의 계획이 언론에서 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생활권의 발전·변화 방안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쉽다. 이는 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더 넓은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세우는 등 추가적인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안의 논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는 영원한 숙제다. 전체적인 상권이 나 경제 모습을 생각하는 대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정리=최명진기자



보험사기 ZERO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 경제부담 줄

발견하면 신고하고!

제안하면 거절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